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5다44657 임금
2005다44664(병합) 임금
2005다44671(병합) 임금
2005다44688(병합) 임금
2005다44695(병합) 임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임채균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5나5814 판결
2005나5821(병합), 5838(병합)
5845(병합), 5852(병합)

판 결 선 고 2007.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하 이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손실보전합의'라고만 한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평화은행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 비록 이 사건 손실보전합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체결 시점이 원고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 당시 원고들이 평화은행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무효라고 보는 이상, 나아가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주인수의 동기가 된 이 사건 손실보전약정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주인수까지 무효로 보아 원고들로 하여금 그 주식인수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다른 주주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투자자본의 회수를 보장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강행규정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6367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의 신주인수계약까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여 각 그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

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평화은행으로는 원고들에게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들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행위를 두고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바, 비록 원심이 가장납입이어서 신주인수행위가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

마.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평화은행이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식의 시가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에서 퇴직금의 중간정산 등 구체적인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고 또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액면으로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원고들을 유인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요건으로서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평 및 신의칙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80%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

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_____

 대법관 김황식 _____

주 심 대법관 이홍훈 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

원고들 목록 : 생략